

헌법적 요구에 따른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성명서

폭염, 폭우,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은 “우리는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은 채로, 기후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과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을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축하여야 한다.

기후과학은 우리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배의 산불과 태풍, 3배의 홍수, 4배의 가뭄과 흉작, 36배의 폭염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기회의 창문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389등)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선입법을 완료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필요최소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첫째,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둘째,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이다.

감축목표가 근거하여야 하는 과학적 기준은 IPCC에 의해서 충분히 제시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책임과 역량의 원칙상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6월,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부합하여야 하고, 탄소예산을 고려해서 미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였다. IPCC가 제시하는 전지구적 감축경로를 따를 때 우리나라 2035년 감축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6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역사적인 권고적 의견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가능한 높은 의욕”을 반영해서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목표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하여 중단, 원상회복,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국회가 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2035 NDC를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자, 전세계 인류와 환경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 시대의 요청이다.

2025년 8월 27일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

강술지 강태리 강행욱 고광민 고부건 고상록 고영남 곽예람 곽태선 권석현 권혜령
김가희 김건영 김단영 김덕현 김도희 김동창 김두나 김민경 김병욱 김보미 김상연
김상희 김석연 김소리 김소진 김시은 김연주 김영남 김영상 김영희 김원영 김유정
김재왕 김정연 김정희 김종서 김주진 김준현 김지림 김지애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진

김차연 김해정 김현정 김현지 김호철 김희진 나희정 남성욱 남지현 남혜선 노종화
노주희 노푸른 노형삼 류다솔 류신환 류하경 목승호 문병효 문한성 박남선 박다혜
박덕영 박동훈 박미혜 박민서 박병섭 박선아 박소영 박시원 박영선 박영아 박용대
박정규 박종원 박지애 박지은 박진영 박찬운 박태현 박한결 박호균 방승주 백범식
백원우 백주선 서성민 서채완 성창익 소삼영 소현민 손지원 송봉준 송시현 신하나
양성우 양승원 여연심 여현동 염정훈 오경민 오동석 오민애 오세정 오지원 위서현
유태영 윤복남 윤성민 윤세종 이경재 이경주 이근옥 이민종 이병주 이보형 이선경
이수연 이에린 이영근 이영기 이예지 이용인 이유진 이은희 이인람 이재학 이재홍
이재희 이종호 이종훈 이준범 이준석 이지윤 이치선 이탁건 이푸른 이학준 이현용
이환희 이황희 이희영 임규선 임선숙 임재홍 임호풍 장덕조 장범식 장서연 장유식
전정환 전진희 정관영 정명화 정신영 정영원 정지민 정혜민 정효주 정훈 조민희 조아라
조아영 조영보 조영신 조윤희 조인영 조지훈 조혜인 채명석 천지선 최나빈 최새얀
최석균 최석빈 최아영 최완 최용근 최인영 최재홍 최정학 최종연 최지영 최지인 최창민
최철웅 최한미 최혁용 최호연 최효재 표재진 하정립 하주희 한경수 한상희 한진수
홍선기 홍승권 홍유진 홍자연 홍정훈 홍혜인 황보현 황선기 황정화 황호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성명서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 모두를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10년 후를 결정할 숫자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어김없이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미래를 그리는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10년 후는 더 안전할 수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후헌법소원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에서 대해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미래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요구이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힌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가능성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더욱 거세고 잦아지는 폭염, 폭우, 태풍 등의 기후재난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주할 10년 뒤의 세상에서 그 꿈과 가능성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교사로서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작 아무런 결정권도, 참정권도 갖지 못한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감축노력을 미루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

를 바 없습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말했듯, 이것은 미래세대를 향한 '배신'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앞으로의 10년뿐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까지의 경로를 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첫 단추로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살아갈 사회의 모습을 향한 현재 세대의 의지를 담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교사들은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올해 정부가 설정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하여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주권국가를 내세운 정부는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축목표의 이행과 실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재난 시대, 환경교육은 생존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을 지구생태시민을 양성하는 생태전환교육으로 전환하고, 변혁적 환경교육을 시급하게 시행하도록 교육대개혁을 해내야 합니다.

2025년 8월 27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교사 1,026명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어린이청소년책 작가들의 성명서

해마다 기후 재난이 더 자주, 더 크게 닥쳐옵니다.

올해도 기후 재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쪽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체가 자신의 삶을 잃었고, 폭염으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황망한 죽음을 맞았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한 마을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매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인류가 지옥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기후 시한폭탄이 똑딱이고 있다. 모든 방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판결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은 기후 행동에 늘 앞장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소원을 가장 먼저 청구한 이들도 청소년 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250여 명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에 대해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판결문을 통해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없는 현재의 기후 관련 법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의 감축 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정해져야 하며, 미래 세대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만간 제출해야 합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유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내릴 선택과 행동이 향후 수천 년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고, 대한민국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책임과 의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많은 국가이며,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

그래서 올해 결정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이 더 안전해질 수도,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뒤로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부담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어린이청소년책 작가들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시민들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에 어린이청소년책 작가들은 1년 전 오늘 내려진 역사적인 판결을 되새기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춰 더 강력한 기후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래 세대에게 지나친 고통과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후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할 때 기후위기 당사자인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기후 문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연대

※ 연명자 총 270명

강모경 강벼리 강인송 고훈실 구연아 길상효 김경은 김경중 김경진 김나월 김다빈
김두를빛 김리리 김명옥 김물 김미형 김미희 김민경 김바다 김보름 김보성 김봄희
김선영 김성훈 소연 김송순 김아지 김영 강이랑 김영주 김우주 김원아 은영 김은중
김일옥 김자미 김재복 김정민 김정희 김태영 김하영 김하은 김해우 김해원 김현수
김현숙 김현실 김현희 김현희 난별 김혜진 김환영 김환희 김희경 김희숙 남예은 남
찬숙 노수진 동길산 류재향 문경민 문미란 문미영 문봄 문이소 민금순 민은영 박경
태 박그루 박남희 박미경 박미라 박미영 박미영 박민영 박소이 박소이 박옥기 박옥
순 박용숙 박월선 박윤우 박윤희 박은경 박은진 박인애 박정화 박종대 박종진 박지
숙 박진형 박채현 박현경 박현정 박혜원 배미주 배석민 배윤주 백승남 백운미 백하
나 백한나 백혜영 백혜진 변은경 새솜 서화교 선안나 성완 성현정 소향 손문희 송
미경 송미선 송수연 송순희 송우들 신서유 신은경 신재섭 신정민 신현경 신희진 심
상우 심진규 안덕자 안덕자 안덕하 안돈기 안미란 안순화 안오일 안유선 안점옥 안
효경 양인자 양지숙 양지안 어린이청소년SF연구공동체플러스알파 엄영란 엄혜숙
연지민 염연화 염희경 오미경 오세란 오시은 오지숙 오진희 오희선 원종찬 유다정
유병천 유영소 유영진 유은경 유지현 유진희 유하정 윤덕진 윤미경 윤성은 윤수란
윤숙 윤슬빛 윤일호 윤정 윤해연 윤혜숙 은이결 이경혜 이금이 이금주 이라야 이란
실 이레 이루카 이명희 이미경 이봄메 이상권 이상미 이상미 이선희 이성숙 이숙현
이여니 이조은 이용주 이유리 이인호 이재영 이정아 이진미 이진우 이채린 이충일
이풍 이향안 이향지 이해령 임근희 임다솔 임미성 임미옥 임순옥 임정자 장미라 장
재석 장지혜 장혜영 장희정 장희주 전경남 전수완 전수우 전아름 전은희 전진영 정
명림 정문주 정상우 정선 정유경 정은환 정이립 정재은 정춘산 정형일 정호준 제성
은 조성자 조순자 조윤주 은경 조은비 조은숙 조진실 조태봉 조현민 조현주 주미경
지숙희 진명은 진수정 진은진 진형민 채은하 채정미 청안 최나미 최미경 최배은 최
소희 최은영 최인정 최주혜 최현주 한서정 한세경 한소곤 한아 함지슬 홍남기 홍선
주 황미숙 황연희 황은지 황혜선 효주 (이상 끝)